

#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영향

신 종 호\*

- I. 서론
- II. 중국의 대외전략 및 동아시아 정책의 변화
- III.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한반도에 대한 함의
- IV.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딜레마
- V. 결론

## 국문요약

시진핑 시기 중국은 '평화적 발전'과 '핵심이익의 수호'를 대외전략 기조로 설정하고,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증대 및 지역강대국 지위 확보를 위해 이전 보다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은 미국과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제안했고,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대외전략 기조의 변화와 주변외교 강화 및 동아시아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한 모두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미중 전략경쟁의 하위구조로 인식하고 있고, 북중관계를 지탱하는 구조적

요인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북핵·북한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역할론'을 과도하게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우리가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중국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이익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대외관계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한·미·중 3자 협력을 강화하여 대북제재의 목표를 조율하고 압박과 외교적 해결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다층적·다차원적 협력 및 정책공공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평화적 발전, 핵심이익, 미중 전략경쟁, 한·미·중 협력, 북핵문제, 정책공공외교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I. 서론

2013년 한중 양국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 이후 ‘최상의 평가’<sup>1</sup>를 받을 정도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한중관계가 2016년 들어서면서 무겁게 가리앉아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북핵 및 북한문제를 둘러싼 전략적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이고,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의 한반도 배치 문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중관계 역시 오랫동안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대립과 협력을 반복해 왔으나,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갈수록 소원해지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북중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바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고, 북한의 핵보유에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국제사회(UN)의 대북제재에도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시했지만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의 대북제재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딜레마는 왜 발생하는가? 본 연구는 이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시진핑(習近平) 시기 강대국 정체성에 기반한 적극적인 대외정책이 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전략 기조는 기존의 ‘평화적 발전(和平發展)’ 이외에도 ‘핵심이익(Core Interests)’ 수호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외전략 기조의 변화는 중국의 ‘평화적 발전’의 핵심지역이자 ‘핵심이익’이 집중되어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주변외교 중시 정책으로 나타났고, 이는 곧 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다음은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전략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의 심화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딜레마를 야기했다는 점이다. 즉,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비함은 물론 미국의 역내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한국과 북한 모두와의 관계를 ‘유지’ 또는 ‘관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글은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전략 기조 및 동아시아 정책의 변화가 한반도 정책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sup>2</sup> 이를 위해 먼저, 시

<sup>1</sup> 2015년 9월 2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중관계의 발전 현황에 대해 최상의 평가(高度评价)를 내린 바 있다. “习近平会见韩国总统朴槿惠, 高度评价中韩关系现状,” 『中国新闻网』, 2015.9.3.

<sup>2</sup>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전략 기조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초기에는 2012년 11월 제18차 당 대회 ‘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이전시기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전망하는 글들이

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전략 기조와 동아시아 정책의 변화 및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현상을 고찰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시진핑 시기의 북중관계와 한중관계를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및 대중국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중국의 대외전략 및 동아시아 정책의 변화

### 1. 대외전략 기조: ‘평화적 발전’과 ‘핵심이익 수호’ 병행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經濟建設)을 위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주변환경의 조성을 대외전략 기조로 설정했다. 마오쩌둥(毛澤東)의 ‘전쟁과 혁명’ 노선에 기초한 세계혁명전략에서 탈피하여, 덩샤오핑(鄧小平) 시기에는 ‘평화와 발전’의 시대에 부합하는 ‘평화적 발전’ 노선으로 전환했다. 국가별·지역별 외교정책 역시 미국과의 협력관계 중심의 강대국외교와 주변국과의 선린(善隣, 安隣, 富隣)외교 및 개발도상국(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외교 등을 강조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은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 증대에 따라 소위 ‘중국위협론’을 불식하는 동시에 ‘책임 대국(負責任的大國)’ 이미지도 강조해야 하는 임무를 동시

---

대부분이었다. 신중호, “중국공산당 제18차 당 대회와 중국의 대외정책 전망”, 『국제문제연구』, 제12권 4호 (2012), pp. 67~101; 이영학, “중국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외정책 전망”, 『아태연구』, 제20권 제1호 (2013), pp. 29~58; 赵可金, “中国外交3.0版:十八大后的中国外交新走向”, 『社会科学』, 2013年 7期; 赵可金, “新理念引领中国新外交”, 『学习时报』, 2014.1.6.; 倪世雄·潜旭明, “十八大以来的中国新外交战略思想初析”, 『人民论坛·学术前沿』, 2014年 6期; 鲁世巍, “新时期中国外交的‘变’与‘不变’”, 『国际问题研究』, 2013年 3期; 高小升, “十八大后中国外交的新变化”, 『党政论坛』, 2013年 12期. 또한 시진핑 집권 이후 미국과의 전략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강대국 외교 및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분석 등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김재철,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 관계’ 구상과 미중관계”, 『중소연구』, 제37권 제3호 (2013 가을); 신성호, “19세기 유럽협조체제(The Concert of Europe)에 나타난 강대국 정치를 통해 본 21세기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국제정치논총』, 제54권 3호 (2014), pp. 141~175; 孙哲 编, 『亚太战略变局与中美新型大国关系』 (北京: 时事出版社, 2012); 苏格, “习近平外交战略思想全面领航”, 『国际问题研究』, 2016年 5期; Michael D. Swaine, “Xi Jinping’s Address to the Central Conference on Work Relating to Foreign Affairs: Assessing and Advancing Major-Power Diplomac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China Leadership Monitor*, No. 46, March 2, 2015. 중국의 강대국 외교가 결국은 중국의 한반도정책의 딜레마로 표출된다거나,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주장을 담은 연구들도 있지만, 이 모두 구체적인 대중국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정남,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의 딜레마: 전환과 지속의 갈림길에서”, 『한국과 국제정치』, 제31권 제3호 (2015), pp. 143~168; 金强一, “朝鲜半岛状态: 中美战略博弈之聚焦点”, 『东疆学刊』, 2016年 第3期.

에 부여받았다. 후진타오(胡錦濤) 시기(2003~2012) 중국은 전임 덩샤오핑의 대외전략 기초를 이어받아 ‘평화적 발전’이라는 대외정책 기초를 유지했고,<sup>3</sup> 2002년부터 정식으로 유엔평화유지군(PKO)에 참여하고 국제다자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sup>4</sup>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다. 특히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있는 대외전략을 추진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당 대회 ‘보고(報告)’에서 시진핑 중심의 새로운 지도부는 향후 5~10년을 중국의 국가발전 목표인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戰略机遇期)로 인식하고, 중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글로벌·지역적 영향력 확대에 걸맞고 국가안보와 발전이익에 상응하는 외교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기반하여 시진핑 지도부는 기존의 ‘평화적 발전’이라는 대외전략 기초를 유지함으로써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달성하려는 의지를 표명함은 물론,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방기하거나 국가의 ‘핵심이익’을 희생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도 동시에 강조했다.<sup>5</sup> 이처럼 시진핑 지도부가 ‘평화적 발전’과 ‘핵심이익 수호’를 병행하는 것은 결국 ‘핵심이익’의 적극적인 수호가 곧 중국의 ‘평화적 발전’의 전제이자 기반임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전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전략 기초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핵심적인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부상(中國崛起)’에 따른 국제적 위상 제고와 글로벌·지역적 영향력의 확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고, 머지않은 장래에 경제규모면에서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강대국을 넘어 글로벌 강대국을 꿈꾸고 있는 중국이 경제적 자신감과 ‘강대국 정체성’에 기반하여 자국의 국제적 위상(Status)과 영향력에 부합하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외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sup>3</sup> 후진타오 시기의 ‘평화적 발전’ 기초에 대해서는 Bingguo Dai, “Stick to the path of peaceful development,” *China Daily*, December 13, 2010 참조.

<sup>4</sup> 중국의 국제다자기구 참여를 통한 영향력 강화와 미중관계 대한 함의에 대해서는 신중호, “중국의 다자안보협력 전략과 미·중관계: ARF, SCO, 6자회담 분석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1권 제4호 (2007/2008년), pp. 141~168.

<sup>5</sup> 제18차 당 대회 ‘보고’에서 중국은 “그 어떤 외부적 압력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는 점을 천명했다. “习近平: 承前启后 继往开来 继续朝着中华民族伟大复兴目标奋勇前进,” 『人民日报』, 2012.11.30.

둘째,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Rebalancing toward the Asia-Pacific)’ 전략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 2009년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를 선언한 이후 미국은 2011년 말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sup>6</sup>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지나치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중국은 미국의 재균형 전략의 추진이 중국의 역내 영향력을 제약함으로써 향후 미중 간 아태지역에서 전략적 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이 처한 국내외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했다.<sup>7</sup>

이러한 대외전략 기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시진핑 지도부는 이전보다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있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먼저, 외교분야의 ‘정층설계(頂層設計)<sup>8</sup>’를 통해 강대국, 주변국, 개발도상국, 다자기구 등과 동반자관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국·러시아·유럽연합 등 강대국과의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구축에 노력하고 있고, 지역적 차원에서는 미국의 중국 봉쇄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주변<sup>9</sup>’ 개념을 제시하여 자신들의

<sup>6</sup>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1월 호주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고, 2012년 1월 미 국방부 전략지침 보고서에도 향후 미군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Remarks By President Obama to the Australian Parliament,” November 17, 2011;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January 5, 2012; John R. Deni (ed.), *Augmenting Our Influence: Alliance Revitalization and Partner Development* (Carlisle, PA: U.S.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e/Army War College Press, 2014).

<sup>7</sup>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에 대한 중국 내 인식과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李文, “美国‘亚太再平衡战略’的失衡与失算,” 『当代世界』, 2016年 11期; 王帆·凌胜利, “中国的外交政策变强硬了吗?” 『当代世界』, 2013年 第3期; 朱锋, “奥巴马政府‘转身亚洲’战略与中美关系,” 『现代国际关系』, 2012年 第4期; 袁鹏, “中国战略机遇期并未终结,” 『人民日报海外版』, 2012.7.30; 樊吉社, “美国‘重返亚洲’与中美关系,” 『美国问题研究报告2012: 美国全球及亚洲战略调整』(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2), pp. 289~304; 金灿荣, “美国难做亚洲的‘老板’,” 『环球时报』, 2012.4.22.; 陶文钊, “美国‘重返亚洲’战略面临五大挑战,” 『新华网』, 2012.1.6.

<sup>8</sup> ‘정층설계(Top-Level Design)’란 일종의 ‘대전략(Grand Strategy)’ 방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교분야의 경우 시진핑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 지도부가 외교분야의 총체적인 전략과 정책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sup>9</sup>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변’이란 육지영토를 접하고 있는 14개 국가와 해양경계를 공유하고 있는 6개 국가를 지칭하지만, ‘대주변’은 인접국 너머에 있으면서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 등)과 미국·서아시아·남태평양지역국가 등이 포함된다. 祁怀高, “关于周边外加顶层设计思考,” 『国际关系研究』, 2014年 第4期, pp. 14~15.

‘전략 공간’을 확장하고 있는데, 아태지역 및 유라시아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염두에 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제안이나 유라시아 경략(經略)을 위한 ‘육상·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 전략 구상<sup>10</sup>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전략 기초의 변화가 동아시아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국의 ‘평화적 발전’을 위한 전략적 핵심지역이 바로 동아시아 지역이고, 중국의 ‘핵심이익’ 역시 대부분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곧 시진핑 지도부의 대외전략 기초의 변화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 2. 동아시아 정책의 변화와 주변외교 전략의 조정

냉전시기 중국은 초강대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sup>11</sup> 중국은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 관계를 대외관계의 핵심변수로 인식했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국가별·사안별로 대응하는 방식을 취해온 것이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소위 ‘중국의 부상’에 따라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대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발생한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중국이 이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역할을 추구하기 시작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동아시아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을 고민하던 중국은 200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6차 당대회 ‘보고(報告)’에서 ‘주변국과 친선, 동반자관계 수립(與隣爲善, 以隣爲伴)’이라는 지역정책을 제기하여<sup>12</sup>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지역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sup>10</sup> 중국이 2013년 제시한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중앙아·유럽 교통망을 잇는 ‘육상실크로드’(一帶)와 동남아·인도양·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실크로드’(一路)를 동시에 구축하려는 전략구상이다. 중국은 2014년 5월 CICA회의에서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금융기구로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제안했고, 11월 APEC회의에서 400억 달러의 ‘실크로드 기금’ 출연을 약속하는 등 ‘일대일로’ 전략구상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2015년 3월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외교부·상무부 공동으로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전망과 행동’을 발표하고 소위 ‘5통(정책疏通, 인프라聯通, 무역暢通, 자금融通, 민심相通)’을 강조했다.

<sup>11</sup> Steven I. Levine, “China in Asia: The PRC as a Regional Power,” in Harry Harding (ed.), *China's Foreign Policy in the 1980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4), pp. 107~145.

<sup>12</sup> 江泽民, “全面建设小康社会开创中国特色社会主义事业新局面：在中国共产党第十六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新华网, 2002年 11月 8日; 王毅, “与邻为善 以邻为伴,” 『求是』, 2003年 4期.

후진타오 집권 2기(2008~2012)부터 중국의 주변외교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는데, 직접적인 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9년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선언이었다. 중국은 이전까지 주변국들과의 선린우호관계가 대부분 경제외교 강화에 치중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했다.<sup>13</sup> 특히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기존에 경제협력에 기초한 선린우호관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탈냉전시기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적 주변환경 조성과 중국위협론 해소 및 역내 영향력 확보라는 대외전략 방침에 따라 동아시아 정책을 추진해왔다. 즉, 중국은 자국이 속한 역내에서 주도적 지위 획득을 통한 영향력 확대가 글로벌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인식하고, 역내 영향력 확대를 통한 지역강대국 지위 확보를 동아시아 정책의 목표로 설정함으로써,<sup>14</sup> 글로벌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능력과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은 평화적 발전과 핵심이익 수호를 강조하는 대외전략 기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변외교에 대한 전략적 조정을 시도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영향력 증대 때문이다. 즉, 중국이 ‘강대국 정체성’을 기반으로 대국(大國)외교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변국의 지지가 절실했기 때문이다.<sup>15</sup> 또한 미국이 ‘아시아 회귀’를 선언한 이후 양자 및 다자관계 강화 전략을 추진하자 중국은 이를 자국에 대한 봉쇄로 인식했고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은 주변국들과의 전략적·경제적 협력을 통한 활로 모색 및 역내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다.

시진핑 시기 중국외교 로드맵에서 주변국외교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2013년 10월 24~25일 당과 국가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주변외교

<sup>13</sup> 程亚文, “中国需走出外交新路,” 『联合早报』, 2012.5.24.

<sup>14</sup> 庞中英, “中国的亚洲战略: 灵活的多边主义,” 『世界经济与政治』, 2001年 10期, p. 33; 宋伟, “中国的东亚区域一体化战略: 限度、方式与速度的反思,” 『当代亚太』, 2011年 第5期, pp. 42~55.

<sup>15</sup> 중국의 대외정책의 중점이 어디인가를 논할 때 “대국이 관건이고, 주변은 우선이며, 개발도상국은 기초이고, 다자는 중요한 무대이다(大國是關鍵, 周邊是首要, 發展中國家是基礎, 多邊是重要舞臺)”는 표현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吳志成, “中國周邊外交需更加重視戰略謀劃,” 『現代國際關係』, 2015年 1期. 대국외교를 강조한 것은 냉전과 탈냉전기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이라는 국가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의 국가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대국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에서 주변국 변수는 항상 강대국관계라는 틀 속에서 고려되어 왔다.

업무 좌담회(周邊外交工作座談會)가 개최되었다는 데서 가장 잘 드러난다.<sup>16</sup> 동좌담회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은 ‘두 개의 100년’<sup>17</sup> 및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주변외교의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국가주권·안보·발전이익 수호, 주변국과의 정치관계·경제유대·안보협력·인문유대 강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친(親)·성(誠)·혜(惠)·용(容)’이라는 새로운 주변외교 이념을 제시하고,<sup>18</sup> 중국과 주변국관계에서 ‘운명공동체(命運共同體)’<sup>19</sup> 개념을 강조했다. 이처럼 시진핑 지도부가 중국의 글로벌 강대국 부상을 위한 주변외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주변외교에 대한 전략적 조정을 시도했다는 것은 곧 중국이 글로벌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차원의 강대국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 글로벌 강대국이 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시진핑 시기 중국이 동아시아 정책과 주변외교에 대한 전략적 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가들의 의구심과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즉, 중국은 여전히 주변국가들을 대응한 지위로 인정하지 않는 ‘중화주의’적 심리를 갖고 있으며,<sup>20</sup> 2031년 10월 ‘주변외교 공작 좌담회’ 개최 직후인 11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으며,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 영토 분쟁 과정에서 공세적(Assertive) 외교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국이 주변외교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 신뢰구축 및 교류회의(CICA)’에서 ‘아시아 안보관’을 주창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제안하는 등 국제적 어젠다를 주도하려는 의도를 자주 표출했다. 이는 시진핑 시기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 및 주변외교가 과거보다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향후 중국이 미국의 국제규범 및 제도적 파워와 패권국으로서의 정통성에 간접적인 도전을 제기함으로써

<sup>16</sup> 동 ‘좌담회’는 정치국 상무위원 7인, 중앙정치국위원, 중앙서기처서기, 외교부장을 포함한 국무위원,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 구성원, 각 성·자치구·직할시와 신강생산건설병단 및 금융기관과 핵심기업 수장, 재외공관장 등이 참석했다. “习近平: 让命运共同体意识在周边国家落地生根,” 『新华网』, 2013.10.25.

<sup>17</sup> ‘두 개의 100년’이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샤오강’(小康)사회를 건설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국을 조화로운 현대사회주의 국가로 변화시킨다는 시진핑체제의 미래비전이다.

<sup>18</sup> 친·성·혜·용의 주변외교 이념에 대해서는 邢丽菊, “从传统文化角度解析中国周边外交新理念,” 『国际问题研究』, 2014年 第3期.

<sup>19</sup> 중국에서 ‘운명공동체’ 개념은 2004년 정비젠(鄭必堅) 중앙당교 상무 부교장이 중국주도의 ‘이익공동체(利益共同體)’ 구축을 주창한 후, 2011년 <중국의 평화발전> 백서에 ‘운명공동체’ 개념으로 발전했고, 제18차 당 대회에서는 인류의 ‘운명공동체’ 의식을 강조했다.

<sup>20</sup> 중국의 인민일보는 2014년 11월 베이징 APEC 회의 기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최한 정상 만찬을 “모든 주변국이 조공을 바치러 중국에 온다(萬邦來朝)”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APEC 设宴水立方 让人有‘万邦来朝’感觉,” 『人民日报』, 2014.11.13.

역내에서 ‘잠재적 현상변경 세력’<sup>21</sup>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시진핑 시기 중국은 자신들이 보유한 전략적·경제적 이점을 활용하여 주변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적·잠재적 영토분쟁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경제적 교류 증대 등을 매개로 하여 베트남, 미얀마, 인도, 남아시아 주변국들과 우호 관계증대에 노력하고 있고, 인도와 베트남 같은 구소련과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국가들과의 관계 진전으로 미국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며 남방 포위선 구축을 저지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이 대일 역사 공조와 경제협력 증대 등을 매개로 하여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한미동맹관계를 이격하고 한·미·일 3국 안보 공조체제의 균열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시진핑 시기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 및 주변외교 강화가 한반도에 주는 중요한 함의라고 할 수 있다.

### III.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한반도에 대한 함의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전략 기조 및 동아시아 정책 목표 달성의 핵심변수는 미국 요인이다. 글로벌 강대국을 지향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서 동아시아 지역은 기존 패권국 미국과의 국가이익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미중 양강(G2) 체제’ 등장 및 양국간 전략 경쟁의 심화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미중관계는 전략적 협력과 경쟁이 일상화(Rutinization)된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진입한지 오래되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에 따라 양국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협력 속에 경쟁’을, 지역적·쌍무적 이슈에 대해서는 ‘갈등 속에 사안별 협력’을 추구하는 복합적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미중은 이른바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에 빠지지 않기 위해 ‘협력’ 분야는 늘리고 ‘경쟁·갈등’ 요소는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남중국해문제와 사이버안보 등을 둘러싼 갈등과 경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sup>21</sup> 미드(Mead)가 지적한 ‘지정학의 부활(The Return of Geopolitics)’은 새로운 미중 양강(G2)체제의 도래에 따른 중국의 현상변경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Walter Russell Mead, “The Return of Geopolitics: The Revenge of the Revisionist Powers,” *Foreign Affairs*, vol. 93, no. 3 (May/June 2014).

미중 ‘뉴 노멀’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상호의존성과 취약성이 심화되어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이고 독점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따라서 미중은 이러한 새로운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현실적·구조적 제약성을 인정하고, 글로벌 차원에서는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 기조로 운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sup>22</sup> 동아시아 지역차원에서는 상호 영향력 확대 경쟁이 불가피하게 전개되고 있다. 즉,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 자국의 역내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 증대 추세를 감안하여 미중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역시 경제적 부상을 기반으로 자국의 ‘핵심이익’ 수호를 위한 공세적이고 민족주의적 성향의 대외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주장하는 등 미국과의 국력 차이를 인정하고 국제질서에 도전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출범 이후 자국 역량의 한계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글로벌·지역적 현안에 대한 전략적 양보를 얻어내기 힘든 상황임을 인식하고,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제안한다. 중국이 미국을 겨냥하여 제안한 신형대국관계의 핵심 내용은 “충돌과 대항, 상호존중, 협력과 공영(Win-Win)”으로, 주권과 영토 등 핵심이익(Core Interests) 수호를 전제로 하여 체제와 발전방식에 대한 상호존중을 강조한다.<sup>23</sup> 이는 곧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른 대중국 견제 의도에는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미국과의 국력 차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하지 않고, 미중 간 충돌 회피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중국의 평화적인 부상 혹은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존중받기를 희망하였다.

신형대국관계는 40여년의 미중관계에서 중국이 미국에 제안한 최초의 양자관계 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구조적 변화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 주도의 기존 국제질서를 인정하고 도전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핵심이익을 존중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공식적인 대중국 정책이 여전히 경쟁과 협력 및 봉쇄를 혼합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 구축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이 최근 경제회복 및 미일동맹 강화 등으로 인해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 혹은 믿음

<sup>22</sup> 양국은 ‘미중 전략·경제 대화’를 쌍무적 현안뿐만 아니라 글로벌·지역적 이슈를 공동 논의하는 기제로 활용하고 있고, 2010년 이후 중단되었던 군사협력을 2011년부터 재개했다.

<sup>23</sup> Wang Yi, “Toward a New Model of Major-Country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Speech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September 2013.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제안한 신형대국관계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동아시아에서 미중관계가 협력보다는 경쟁과 갈등 요인이 심화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부상하는 중국을 위협으로 보는 미국의 인식과 미국은 점차 쇠퇴하고 있다는 중국의 인식이 상호 ‘전략적 불신(Strategic Distrust)’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sup>24</sup>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이 미국을 겨냥하여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제안한 것에 대해 미국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 역시 상호 전략적 신뢰의 부족과 상대방 의도에 대한 의구심에서 기인한다. 특히 미국내에서 시진핑의 주변외교 강조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맞선 중국판 ‘아시아 회귀’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거나, 심지어는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구축 제안을 ‘아시아관 먼로주의(Monroe Doctrine)’<sup>25</sup>로 인식하는 등 미중 간 상호 전략적 불신이 여전하다.

시진핑 시기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동아시아에서 ‘규범 경쟁(Norm Competition)’의 가능성이 증대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제정치경제의 주요 행위자로서 국제규범과 규칙 및 제도 등을 주도해 온 미국은 기존의 규범과 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중국을 적으로 보지 않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동반자로 인식하고 ‘중국의 부상’을 환영하면서도, 그것이 반드시 국제법과 국제규범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sup>26</sup> 하지만 중국은 최근 ‘아시아 신뢰구축 및 교류회의

<sup>24</sup> 중국의 저명한 미국전문가인 왕지쓰(王缉思) 북경대 교수와 미국의 저명한 중국전문가인 리버셀(Lieberthal)교수는 2012년 공저에서 “미중 경쟁은 제로섬 게임이며, 중국지도부는 미국이 더 이상 놀라운 국가가 아니며 신뢰할만한 나라도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Kenneth Lieberthal and Wang Jisi, *Addressing U.S.-China Strategic Distrust*, John L. Thornton China Center Monograph Series Number 4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March 2012).

<sup>25</sup> ‘중국판 먼로주의’에 대한 논쟁은 이미 2008년 이후 동남아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외교 공세가 시작되면서부터 언급되기 시작했다. 리처드 할로란(Richard Halloran), “[해외논단]중국의 동남아 패권 야욕”, 『세계일보』, 2008.1.31.; Joshua Kurlantzick, “China’s Charm: Implications of Chinese Soft Power,” *Policy Brief*, No. 47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pp. 1~8. 그리고 시진핑 체제 등장 이후 중국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외정책이 추진되면서 ‘아시아관 먼로주의’ 논쟁이 다시 등장했다. Patrick Mendis, “Chinese behaviour in Asian seas driven by Monroe Doctrine of its own,” *South China Morning Post*, May 26, 2014. ‘중국판 먼로주의’ 논쟁에 대한 중국의 비판은 다음을 참조. 王义桅, “亚洲新安全观是中国版门罗主义?” 『观察网』, 2014.7.8. <[http://www.guancha.cn/WangYiWei/2014\\_07\\_08\\_244550.shtml](http://www.guancha.cn/WangYiWei/2014_07_08_244550.shtml)>; 왕이 외교부장의 CSIS 연설은 王毅, “发展中的中国和中国外交: 王毅在美国战略与国际问题研究中心的演讲,” 『人民日报』, 2016.2.26. 참조.

<sup>26</sup> 2014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이 필리핀 방문시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부응하는 아시아가 중요하

(CICA)’에서 ‘아시아 안보관’을 제시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하는 등 국제적 어젠다를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향후 미중 간 ‘규범 경쟁’이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하지만 지난 7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규범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중국이 이를 단기적으로 상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미중 간 전략경쟁에 대한 최대 영향 요인은 미중의 종합국력의 변화 및 그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 여부라 할 수 있다. 경제력에서는 미중 모두 저성장 기조가 일상화되는 ‘뉴 노멀(New Normal)’시대에 적응하겠지만, 2019~2021년경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sup>27</sup> 반면, 국방력은 중국이 꾸준히 증액하고 있지만 미국의 압도적 우세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발간한 세계 군사력 보고서(The Military Balance)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미국의 국방비는 5,995억 달러로 중국의 1,458억 달러를 4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국방비 증가율이 평균 10.7%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증가 추세는 지속되었지만, 전체적인 국방예산 및 군사혁신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우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20년을 전후로 중국의 경제력은 미국을 앞지를 수 있지만, 군사력이나 정치력·문화력 수준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이 격차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sup>28</sup>

다”는 점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영토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써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필리핀 방문시 마닐라에서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을 참조. “President Obama Speaks at Port Bonifacio,” April 29, 2014, <<https://www.whitehouse.gov/photos-and-video/video/2014/04/29/president-obama-speaks-port-bonifacio>>. 미국의 카터(Carter) 국방방관 역시 2016년 *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Ash Carter, “The Rebalance and Asia-Pacific Security: Building a Principled Security Network,”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2016.

<sup>27</sup>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2019년에도 6.5%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하여, 2020년 전후로 세계 제1의 경제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미국은 2019년에도 2.6%로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한다.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4* (2014.10), pp. 185~188. 또한 중국과 미국의 GDP 성장률을 각각 7%와 3%로 추산할 때 중국은 2021년에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망도 있다. S.R. and D.H., “Catching the eagle,” *The Economist*, August 22, 2014. 미중의 구매력평가(PPP) 기준에서도 중국이 17조 6천억 달러로 미국의 17조 4천억 달러를 추월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중국이 GDP 규모로 미국을 약 20% 앞설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Keith Fray, “China’s Leap Forward: Overtaking the U.S. as World’s Biggest Economy,” *Financial Times*, October 8, 2014.

<sup>28</sup> 중국의 군사력 증가가 미국의 압도적 지위를 대체하기는 힘들지만,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기존

중국이 국제규범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미중관계는 양국의 종합국력, 상호 전략적 불신 해소 여부,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미국의 호응 여부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겠지만, 지역별·이슈별로 전략적 협력과 경쟁 및 갈등이 일상화되는 복합적인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즉, 글로벌 이슈(테러, 환경, 글로벌 경제회복, 우주안보 등)에 대해서는 전략적 협력 기조가 우세할 것이고, 지역적 이슈에 대해서는 상호 전략적 불신으로 인해 역내 영향력 확대 경쟁과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민감한 지역적 이슈(남중국해문제, 북핵문제 등)에 대한 지정학적 차원의 현상 유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쌍무적 차원의 이슈(대만문제, 사이버안보, 무역적자 등)에 대해서는 전략적 갈등 기조가 우세할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 주도권을 경쟁과 갈등은 역내 국가 간 전략·안보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와 한반도문제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공해전(ASB)’ 전략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중국이 주도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해졌다. 한반도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책임공방과 함께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중관계의 악화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역내 국가 간 관계-즉, 남북한관계, 한중관계, 중일관계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미중 양국이 오랫동안 대부분의 민감한 이슈에 대한 ‘위기관리’ 기제를 작동하고 있으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위기관리 체제는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중 갈등시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자 하는 전략적 오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중국은 당분간 현존 패권국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보다는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 경쟁을 펼칠

---

패권을 완만하게 침식할 것이라는 주장은 Michael D. Swaine (eds.), *China's Military and the U.S.-Japan Alliance in 2030: A Strategic Net Assessment*,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13) 참조. 중국이 2023년경 미국과 함께 양극(兩極)을 형성하겠지만 군사력과 문화력 차원에서는 미국에 열세일 것이라는 점은 閻學通 著, 『历史的慣性』(北京: 中信出版社, 2013) 참조.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을 자국의 세력권으로 포섭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 IV.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딜레마

최근 중국의 대외전략 기조의 변화와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 전략경쟁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3가지의 원칙적 입장-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유지해왔다.<sup>29</sup> 하지만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중시하고 있는 시진핑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패권국 미국과의 전략경쟁에 대비함은 물론 미국의 역내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남북한 모두와의 관계를 ‘유지’ 및 ‘관리’해야 하는 ‘딜레마’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딜레마가 북중관계 및 한중관계에서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 1. 북중관계: 경색 국면의 지속과 전략적 탐색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딜레마는 북중관계에서 잘 드러나는데, 시진핑 시기 북중 양국은 북핵문제로 인해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북중관계에 영향을 주는 역사적·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양국이 자국의 전략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상호 탐색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 2013~2014년 북중관계를 보면 전통적 우호협력관계에 기반한 ‘특수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제 2094호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했고, 결의안 채택 직후인 3월 8일 중국외교부는 북중관계를 ‘일반 국가 대 국가 관계’라고 밝혔으며, 5월에는 중국의 4대 산업은행은 북한과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물론 이러한 북중 냉각 국면에서 양국은 상대방의 전략적 의도를 탐색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으나,<sup>30</sup> 12월 장성택

<sup>29</sup> “王毅强调中方在朝鲜半岛问题上三个‘坚持’立场,” 『新華網』, 2013.4.13.

<sup>30</sup> 예를 들어, 2013년 2월 3차 북핵실험 이후 5월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6월 양국 외교부들 간 3차 전략대화가 진행되었으며, 7월 리위안차오(李源朝) 중

처형 이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양국관계는 더욱 냉각되었다. 2014년에도 그동안 북중 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해 온 다양한 기제들-최고위급 상호교류, 전통적 우호관계 확인, 경제협력 및 지원, 정치·안보 현안 입장 조율 등-이 거의 작동되지 않았다.<sup>31</sup>

하지만 2015~2016년 북중관계 상황을 보면 북중관계가 정상국가관계로 변화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5년 10월 9일 북한 노동당 창당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류윈산(劉雲山) 상무위원을 통해 북한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에서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류윈산은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희망했다.<sup>32</sup> 이는 곧 중국정부가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중국은 한반도 정책의 3원칙-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거론하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제2270호에 대해 중국은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반영하여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2016년 3월 미국 CSIS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핵 반대, 한반도에서의 전쟁 및 혼란 반대, 중국의 정당한 국가이익의 보장 등을 강조한 바 있다.<sup>33</sup> 9월에 발발한 5차 북핵실험 이후에도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의 대북제재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sup>34</sup> 이렇듯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향후 협상(6자회담) 유도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체제의 붕괴를 촉진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진핑 시기 북중관계는 과거에 비해 경색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sup>35</sup> 양

국 국가부주석이 북한의 정진협정 체결 60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했다.

<sup>31</sup> 시진핑-김정은 시기 북중관계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는 신중호, “최근 북중관계 분석 및 2015년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5-2, 2015.1.15.).

<sup>32</sup> “刘云山会见金正恩转交习近平总书记亲署函,” 『人民日报』, 2015.10.10.

<sup>33</sup> 王毅, “发展中的中国和中国外交: 王毅在美国战略与国际问题研究中心的演讲,” 『人民日报』, 2016.2.26.

<sup>34</sup> 중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추구함과 동시에 북중관계를 관리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王俊生, “中朝‘特殊关系’的逻辑,” 『社会科学文摘』, 2016年 3期; 陈向阳, “中国须以‘创造性的危机管理’重掌朝核问题主动权,” 『求知』, 2016年 4期 등 참조.

<sup>35</sup> 시진핑 시기 북중관계 냉각의 이유로는 중국의 강대국 정체성으로의 변화, 중국의 대미 신행대

국은 여전히 많은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고,<sup>36</sup> 양국관계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요인들<sup>37</sup>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립관계로 돌아섰다고 보기도 어렵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의 장기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와 일본 등과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했으나 성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협력관계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최근 2~3년간 나타났던 북중관계의 냉각 현상은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양국 모두 궁극적으로 자국의 전략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탐색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 및 시진핑 면담 성사, 7월 8일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강력한 반발 및 ARF 회의에서 북중 밀착 과시 등에서 나타나듯이,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자국의 전략적 이익이 침해받았다고 인식하거나, 역내 전략적 균형이 훼손되었다고 인식할 경우 북한문제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여 자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 2. 한중관계: 전략적 가치 평가와 외교안보적 압박

시진핑 시기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딜레마는 한중관계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민감한 외교안보적 사안에 대해서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되고 중국의 주변외교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진핑 지도부는 한반도를 자국의 영향력 확장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보고 한국에

---

국관계 구축에 대한 전략적 고려, 북한의 핵보유 의지와 중국의 반대, 3차 핵실험 이후 중국 내에서 나타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증대,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에 대한 북한의 비난,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한중관계 발전 등이 제기된다. 자세한 내용은 신종호, “시진핑-김정은 시기 북중관계 평가와 전망,”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문, 2016.7.).

<sup>36</sup> 즉, 중국과 북한은 같은 사회주의 체제라는 점, 중국외교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지정학적 가치가 여전히 높다는 점, 북한 역시 중국의 경제협력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 등이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고 때때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단절 수준으로 행동하지 않는 이상 중국 역시 북한을 ‘포기’하기 어렵다.

<sup>37</sup>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의 ‘대국외교’ 추진 및 그에 따른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고,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중일 간 역사·영토문제를 둘러싼 세력경쟁이 시작되었으며, 한·미·일 3국 공조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한중관계도 경제·사회분야 발전 속도에 비해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문제 등을 포함한 외교·안보분야의 신뢰관계는 여전히 높지 않다. 또한 중국 내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로 인해 북한을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으로 인식하는 그룹 역시 여전히 많다.

대한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미일 동맹 강화 추세,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역사분쟁과 역사 갈등 및 동아시아 세력 경쟁 등으로 인해 중국의 주변외교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 2013년과 2014년 양국 정상 상호 국빈방문을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2015년 9월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한국의 대통령이 참석한 점,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중 양국이 일본의 식민침략에 공동대응 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 역시 그 반증이다.<sup>38</sup>

하지만 한중 양국의 新지도부 출범 이후 양국관계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북핵과 북한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라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제약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sup>39</sup> 최근에는 주한미군에 사드(THAAD)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중간 입장 차이 존재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sup>40</sup> 더 중요한 문제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한중관계의 제약 요인들의 근저에 모두 미국요인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일치하지만 구체적인 쉼범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즉,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지지하면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식에 대해서는 약간씩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의 공조를 통해 줄곧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주장했고, 최근 잇따른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자체적인 대북 독자제재 및 국제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 역시 그동안 한반도 정책의 3원칙을 줄곧 강조해 왔으나, 4차 북핵실험 이후에는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병행론을 주장하는 등 대화와 협상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조는 5차 북핵실험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다음으로 미중의 대북제재 공조 역시 균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을 자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독자적으로 대북제재의 수위를 높여가는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물론 4차 북핵실험 이후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대화’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되 북한과의 대화 접촉을 시도할 가

<sup>38</sup> “习近平会见韩国总统朴槿惠:高度评价中韩关系现状,” 『中国新闻网』, 2016.9.3.

<sup>39</sup> 한중관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는 이희옥, “중국의 신형대국론과 한중관계의 재구성,” 『중국학연구』, 제67집 (2014), pp. 273~276.

<sup>40</sup> “习近平会见韩国总统朴槿惠:反对美国在韩国部署萨德,” 『人民日报』, 2016.9.6.

능성도 제기되었지만,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미국은 추가적인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공언하고 있다. 특히 2016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그동안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을 좀 더 강경한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중국은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5월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방중과 같은 '북한 카드'를 활용하여 미국의 대북제재와 압박 강화에 대응하고 있다.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중국정부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 표명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북한의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수준의 대북제재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북핵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쟁점의 차이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양국이 한반도문제를 미중 간 동아시아 전략경쟁의 하위구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곧 미중이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미중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접점 모색 or 타협 시도 or 이익공유 or 담합'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북핵문제와 대북제재 및 사드 배치 등을 둘러싼 미중의 상호인식 차이와 갈등 표출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도록 하는 전략적 오판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사드 배치 문제 역시 중국은 미중관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한미의 사드 배치 추진 계획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고,<sup>41</sup> 올해 6월 20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안 제2270호 이행보고서에도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sup>42</sup> 7월 8일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도 중국은 동아시아 전략 및 미중관계에 대한 전략적 고려 차원에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즉,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이 미국의 동아시아 MD 체계 구축의 중요한 진전이자 '전략적 균형'의 훼손으로 인식하고, 한국이 사드 배치를 통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과 동맹 강화를 통한 대중국 포위·견제 전략에 편승한 것으로

<sup>41</sup> 2014년 11월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사드 한국 배치가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2015년 2월에는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 3월 16일 방한한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해 주길 바란다"며 직접적인 반대 입장을 표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16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직접 한미 정상에게 "한반도 사드 배치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sup>42</sup> 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각국의 이행보고서 제출 현황 및 내용은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un.org/sc/suborg/en/sanctions/1718/implementation-reports>> 참조.

인식하며, 사드 레이더(AN/TRY-2)의 탐지 활동이 길림성(吉林省)·절강성(浙江省)에 배치된 동평(DP) 계열 중거리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사드 배치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실질적 효용이 없는 과도한 대응이자 중국 견제용으로 인식하고 있다.<sup>43</sup>

하지만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상응 조치’를 언급했으나<sup>44</sup> 역내 중요 현안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중관계를 파국으로 이끌지는 않고 있다. 이는 곧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한국의 전략적 가치 증대, 미중 전략경쟁 추세, 중일 갈등, 남중국해 문제와 같은 역내 현안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선택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중국은 향후 걸으로는 사드 배치에 대한 강력한 비난 언술을 표명하면서 한국이 사드 배치 프로세스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하지만 7월 말 열린 ARF 회의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북핵 불용과 대북제재 결의안의 충실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 했다는 점을 볼 때, 실제로는 비핵화를 위한 역할 모색 및 역내에서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북한의 추가 도발에는 강력 대처함으로써 ‘역내 안보 관리자’ 역할을 자임할 것이다.

## V. 결론

한반도가 속한 동아시아에 새로운 지정학적 위기가 도래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동인은 바로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을 위협으로 보는 미국의 인식과 미국은 점차 쇠퇴하고 있다는 중국의 인식이 동아시아에서 미중 전략경쟁을 심화시키고 있고, 여기에 중일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 미일 안보협력 강화, 한일관계 경색, 북핵문제 미해결 등이 더해지면서 동아시아 정세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sup>45</sup> 특히 2016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행정부가 기

<sup>43</sup>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응방안,” 『KINU 통일나침반』 (16-5), pp. 6~7.

<sup>44</sup>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고, 국방부 ‘담화’를 통해 역시 ‘상응 조치’를 언급하였다. 또한 중국정부는 한미의 방어적 차원의 사드 배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미의 설명 및 공동논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sup>45</sup> 동아시아에서 미중관계의 경쟁과 갈등 및 협력의 동화 및 그에 따른 동아시아 질서의 복합성에 대해서는 김재철, 『중국,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 신흥강대국의 부상과 지역질서』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5).

존의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 및 미중관계의 주요 현안들—즉, 아시아 재균형 전략,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 1기(2017~2020)와 시진핑 집권 2기(2018~2022) 동안 동아시아 정세의 복합성 및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바로 동아시아에서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는 곧 정치·군사분야는 미국에, 경제·통상분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동아시아에서 미일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할수록 한국의 역할은 제한적으로 변할 것이고, 북중관계와 북일관계 및 중일관계의 변화 추세에 따라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북핵문제 해결도 갈수록 요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외교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대북정책이 모두 중국외교의 대변화 추세 및 미중관계의 변화 등에 연동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역할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실제적으로 한중 양국의 新지도부 출범 이후 양국관계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제약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국면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전략 구도는 많은 변화를 겪겠지만,<sup>46</sup>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미중 전략적 경쟁과 갈등이 한반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역내 갈등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선택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대비하여 한국의 국가이익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외교원칙과 방향을 정립하여 대외관계에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과 북한 핵·미사일 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안보·국방·통일 분야의 국가이익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국가대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sup>46</sup> 5차 북핵실험에 대해서는 정성운, “북한 5차 핵실험의 의미와 파장,”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6-24, 2016.9.13.); 진창수·이상현·조남훈·이희욱, “5차 북핵실험 평가와 대응,” (세종연구소 정책브리핑 No. 2016-23, 2016.9.13.).

하다. 이와 동시에 주변국가들과의 신뢰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동아시아 다자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역내 국가들의 지역전략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굳건한 한미 동맹 유지와 한·미·일 전략적 소통을 중시하되 한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의 적으로 돌리지 않는 대외 정책 역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동반자관계의 조화와 균형의 추진은 한반도가 처한 숙명이다. 하지만 성급한 한중 밀월관계는 한미동맹 훼손 및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로 한중 양국의 新지도부 출범 이후 양국관계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제약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역할을 기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반도문제 및 북핵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중국과 미국의 신형대국관계 구축의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미중 간 이견을 조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미·중 3각 협력의 범위를 북핵문제에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대북 압박 조치를 마련하되, 대북제재의 목표와 관련된 한미 간 이견을 해소한 후 한·미·중 3국 간 의견을 조율하는데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그동안 미중 양국에게 한반도문제(특히 북핵문제)는 다른 글로벌·지역적 이슈(IS문제, 남중국해문제 등)보다 덜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전략적 타협 혹은 묵인’의 성격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중 간 ‘전략적 타협’(‘담합’ 혹은 ‘카르텔’)을 통한 한국 배제 가능성에 대비함은 물론, 중국이 ‘비핵화+평화체제 병행론’을 제안한 배경과 의지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과 원칙을 미리 마련할 필요도 있다.

넷째,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대북·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북핵·북한문제와 사드 배치 문제 등과 같은 민감한 외교안보적 사안으로 인해 한중관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2017년이면 수교 25주년을 맞이하는 한중관계가 좀 더 성숙한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침체기에도 다양한 층차(정부, 지방정부, 민간 등)와 영역(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교류협력을 유지함으로써 상호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한반도문제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공공외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한중 관계 장기 비전 등을 고려한 대중국 ‘전략적 사고’와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변 강대국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이 그들에게 유리하다는 논리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통일공공외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이미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의 최대 영향요인이자 한반도의 통합 및 통일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일 한국의 건설이 중국의 안보 불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분단 관리의 기회비용이 줄어들고 중국에게 안보적·경제적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 접수: 10월 28일 ■ 심사: 11월 10일 ■ 채택: 12월 9일

## 참고문헌

### 1. 단행본

김재철. 『중국,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 신흥강대국의 부상과 지역질서』. 파주: 한울 아카데미, 2015.

Deni, John R. (ed.). *Augmenting Our Influence: Alliance Revitalization and Partner Development*. Carlisle, PA: U.S.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e/Army War College Press, 201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4.

Levine, Steven I. “China in Asia: The PRC as a Regional Power.” In *China’s Foreign Policy in the 1980s*, edited by Harry Hardin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4.

Lieberthal, Kenneth and Wang Jisi. *Addressing U.S.-China Strategic Distrust*. John L. Thornton China Center Monograph Series Number 4.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March 2012.

Swaine, Michael D. (eds.). *China’s Military and the U.S.-Japan Alliance in 2030: A Strategic Net Assessment*.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13.

孫哲 編. 『亞太戰略變局與中美新型大國關係』. 北京: 時事出版社, 2012.

閻學通 著. 『歷史的慣性』. 北京: 中信出版社, 2013.

## 2. 논문

- 김재철.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 관계’ 구상과 미중관계.” 『중소연구』. 제37권 제3호, 2013.
- 신성호. “19세기 유럽협조체제(The Concert of Europe)에 나타난 강대국 정치를 통해 본 21세기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국제정치논총』. 제54권 제3호, 2014.
- 신성호. “중국공산당 제18차 당 대회와 중국의 대외정책 전망.” 『국제문제연구』. 제12권 제4호, 2012.
- \_\_\_\_\_. “중국의 다자안보협력 전략과 미·중관계: ARF, SCO, 6자회담 분석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1권 제4호, 2007/2008.
- \_\_\_\_\_. “시진핑-김정은 시기 북중관계 평가와 전망.”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문, 2016.7.
- \_\_\_\_\_. “최근 북중관계 분석 및 2015년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5-2, 2015.
- 이영학. “중국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외정책 전망.” 『아태연구』. 제20권 제1호, 2013.
- 이정남.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의 딜레마: 전환과 지속의 갈림길에서.” 『한국과 국제정치』. 제31권 제3호, 2015.
- 이희옥. “중국의 신형대국론과 한중관계의 재구성.” 『중국학연구』. 제67권, 2014.
- 정성윤. “북한 5차 핵실험의 의미와 파장.”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6-24, 2016.
- 진창수·이상현·조남훈·이희옥. “5차 북핵실험 평가와 대응.” 세종연구소 정책브리핑 No. 2016-23, 2016.
- Carter, Ash. “The Rebalance and Asia-Pacific Security: Building a Principled Security Network.”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2016.
- Kurlantzick, Joshua. “China’s Charm: Implications of Chinese Soft Power.” *Policy Brief*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No. 47, 2008.
- Mead, Walter Russell. “The Return of Geopolitics: The Revenge of the Revisionist Powers.” *Foreign Affairs*. vol. 93, no. 3, May/June 2014.
- Swaine, Michael D. (eds.). “Xi Jinping’s Address to the Central Conference on Work Relating to Foreign Affairs: Assessing and Advancing Major-Power Diplomac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China Leadership Monitor*. No. 46, 2015.
- Wang Yi. “Toward a New Model of Major-Country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Speech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September 2013.
- 高小升. “十八大后中国外交的新变化.” 『党政论坛』. 2013年 第12期.
- 陈向阳. “中国须以‘创造性的危机管理’重掌朝核问题主动权.” 『求知』. 2016年 第4期.
- 金强一. “朝鲜半岛状态: 中美战略博弈之聚焦点.” 『东疆学刊』. 2016年 第3期.
- 李文. “美国‘亚太再平衡战略’的失衡与失算.” 『当代世界』. 2016年 第11期.
- 鲁世巍. “新时期中国外交的‘变’与‘不变’.” 『国际问题研究』. 2013年 第3期.

- 倪世雄·潜旭明. “十八大以来的中国新外交战略思想初析.” 『人民论坛·学术前沿』. 2014年 第6期.
- 樊吉社. “美国‘重返亚洲’与中美关系.” 『美国问题研究报告2012:美国全球及亚洲战略调整』.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2.
- 庞中英. “中国的亚洲战略: 灵活的多边主义.” 『世界经济与政治』. 2001年 第10期.
- 祁怀高. “关于周边外加顶层设计的思考.” 『国际关系研究』. 2014年 第4期.
- 宋伟. “中国的东亚区域一体化战略: 限度、方式与速度的反思.” 『当代亚太』. 2011年 第5期.
- 苏格. “习近平外交战略思想全面领航.” 『国际问题研究』. 2016年 第5期.
- 王俊生. “中朝‘特殊关系’的逻辑.” 『社会科学文摘』. 2016年 第3期.
- 王帆·凌胜利. “中国的外交政策变强硬了吗?” 『当代世界』. 2013年 第3期.
- 王毅. “与邻为善 以邻为伴.” 『求是』. 2003年 第4期.
- 吳志成. “中國周邊外交需更加重視戰略謀劃.” 『現代國際關係』. 2015年 第1期.
- 邢丽菊. “从传统文化角度解析中国周边外交新理念.” 『国际问题研究』. 2014年 第3期.
- 赵可金. “中国外交3.0版: 十八大后的中国外交新走向.” 『社会科学』. 2013年 第7期.
- \_\_\_\_\_. “新理念引领中国新外交.” 『学习时报』. 2014.
- 朱锋. “奥巴马政府‘转身亚洲’战略与中美关系.” 『现代国际关系』. 2012年 第4期.

### 3. 기타자료

*China Daily.*

Department of Defense.

*Financial Times.*

*South China Morning Post.*

*The Economist.*

『观察者网』.

『新华网』.

『联合早报』.

『人民日报』.

『人民日报海外版』.

『中国新闻网』.

『环球时报』.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https://www.un.org>>.

미국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

Abstract

## Change in China's Foreign Strategy in the Xi Jinping Era and Its Impact on China's Policy on Korean Peninsula

*Jong-Ho Shin*

China has set ‘peaceful development’ and ‘safeguarding core interests’ as the tenets of foreign strategy in the Xi Jinping era. Beijing has pursued an active and engaged foreign policy to boost its influence in East Asia and secure its spot as the regional power. Based on this principle, China suggested ‘a new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 with the U.S. and has responded aggressively to the territorial dispute in the South China Sea.

The problem is that change in China's foreign strategy tenet, the strengthening of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East Asia affect China's policy on Korean Peninsula. From the Chinese point of view, which focuses on having greater influence over the Korean Peninsula, it strategically ‘maintains’ the relations with both Koreas as a preparatory measure for the strategic competition with the U.S.

Regarding the facts that China perceives the issue of Korean Peninsula as a subset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structural factor that upholds the DPRK-China relations remains intact indicates that it is difficult for South Korea to excessively rely on ‘China's role’ in solving the North Korean issue and the nuclear issue. Rather, South Korea should present a long-term vision on North Korea and Korean unification to China to take the initiative in the resolution to the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To this end, Seoul should establish a priority list for national interests, consistently implement it in foreign affairs, coordinate the goal of North Korea sanctions by bolstering ROK-U.S.-China trilateral cooperation, and simultaneously consider pressure and diplomatic solution. Finally, multilayered and multidimensional approaches to cooperation and ‘policy public diplomacy’ ought to be reinforced to substantiate ROK-Chin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Key Words:** Peaceful Development, Core Interests,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ROK-U.S.-China Cooperation, North Korean Nuclear Issue, Policy Public Diplomacy

